

## 공적기금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

– 경찰 입장에서 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영의 문제점과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하여

### A Study on the Fairness of Public Fund Operation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ce and Measures to Secure Finances

김 학 신(Kim, Hak Shin)\*\*

#### ABSTRACT

Article 30 of the current Constitution states ‘A citizen who has suffered damage to life or the body due to a criminal act of another person may receive rescue from the state as prescribed by law; therefore, the state stipulates the right of crime victims to claim relief to protect them.

Based on the idea that the state should rescue the people who are crime victims, ‘The Act of Rescuing Crime Victims’ was enacted on November 1st, 1987, and ‘The Act of Protecting Crime Victims’ was revised in 2010 and incorporated therein. As written above,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of Protecting Crime Victims’ regulated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However, the state faced difficulty in protecting and supporting crime victims effectively, and the biggest cause of it is the absolute shortage of its budget. Therefore, ‘The Act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was enacted on May 5th, 2010 to install part of the fines as the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nd the fund raised formed money to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However, as the ministries are currently executing their own relief funds for crime victims separately, it is difficult to conduct projects systematically and also provide prompt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In this way, problems associated with inefficiency in executing the relief funds have been raised constantly.

In 2020, the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totaled 101.2 billion won, of which the Ministry of Justice and Prosecutors’ Office accounted for 45% with 44.9 billi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31% with 31.4 billion,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2% with 22.3 billion. However, the victim protection fund allocated to the police that has to provide protection and support facing crime victims first at the front is 1.3 billion won, only 1.3% of it; therefore, disparity in the distribution of the protection fund is fairly serious.

\* 본 논문은 2020년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재정적 지원 확보 방안”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 하였음.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법학박사

In particular, due to the protection fund insufficiently allocated to the police, it is difficult to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promptly by the police, and this situation has continued for several years. Up until now, the National Assembly and related organizations have kept bringing up problems about the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for example, the fund organized particularly for some government departments, much more support for indirect support than direct support, or delay in the payment of funds such as moving expenses, medical expenses, and emergent living expenses.

Accordingly, based o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poorly allotted to the police, this study has attempted to present operational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ce and provide measures to secure finances for protecting crime victims properly.

Key words: The Act of Protecting Crime Victims, The Act of Rescuing Crime Victim, relief fund, fund management, moving expenses

## I. 문제제기

현행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가 구조해야 한다는 사상에 근거하여 1987. 11.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이에 통합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하였지만, 국가가 범죄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어려운 것은 국가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래서 2010. 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하여 벌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설치하고, 이 기금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제도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은 인정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각 정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호기금을 집행하고 있다 보니, 체계적인 사업수행이 어렵고, 신속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는 등 구호기금 집행에 대한 비효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총 1,012억이고, 이중 법무부·검찰청이 459억으로 45%, 여성가족부가 314억으로 31%, 보건복지부가 223억으로 22%를 차지한 반면, 범죄피해자들 가장 먼저 만나서 보호 및 지원해주어야 하는 경찰에 배정된 피해자보호기금은 13억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는 등 보호기금의 배분에 있어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다.

특히, 경찰에 배정된 열악한 보호기금으로 인하여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는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동안 국회 등에서는 범죄피해자기금에 대하여 특정 정부부처 중심으로 기금이 편성되거나, 직접지원비 보다는 간접지원비 과다 지원,<sup>1)</sup> 기금의 지급지연 등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다.

또한 국회 본회의 2018년, 2019년 예산안 부대의견에서 법무부는 보복범죄를 우려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를 경찰의 신변보호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지급하고, 치료비, 긴급생계비 사업의 집행지연,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불편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기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건수는 2017년 6,889건, 2018년에는 9,442건, 2019년에는 전년도 대비 44.9%가 급증한 13,686건, 2020년에는 14,743건의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있다.<sup>2)</sup> 이처럼 신변보호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경찰청에 배정된 보호기금은 매년 전체 예산의 1%대에 불과하여 경찰에 요청된 신변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경찰에 배정된 열악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입각하여 경찰의 입장에서 살펴 본 운영상 문제점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정적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용 실태

###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개념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범죄 등의 강력범죄는 3만 5천여건이며, 폭행·상해범죄 등 폭력범죄는 23만 2천여건이 발생했다.<sup>3)</sup> 이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들을 학문적인 의미에서 범죄피해자라고 한다.<sup>4)</sup> 즉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1) 간접비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운영비가 대부분이다. 검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법무부의 스마일센터, 여성가족부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센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피해자 전담기관 등 정부 부처가 산하에 두고 있는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6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일보, “『단독』 범죄피해자기금 74%가 운영비로 샌다”, 2019. 7. 8 일자.

2) 머니투데이, 성관계 강요에 감금에...불안한 사람들 ‘신변보호’ 3년새 2배 ↑, 2021. 3. 4일자.

3) 한국경제, 강력범죄 줄고, 사기 등 ‘불황형 범죄’는 증가, 2020. 5. 4일자.

4) 피해자(victim)의 사전적 의미로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즉, 법적 또는 도의적 견지에서 보호가치 있는 이익과 관련하여 명확한 외부적 침해가 있고, 이로 인하여 손실과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는 주체가 피해자로 정의된다. Kennedy, L. W. and Sacco, V. F., Crime Victims in Cont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4-5; 김연수·이재영,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직 및 예산운영의 개선방안, 한국경찰

직·간접적으로 신체, 감정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겪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에서 범죄피해자를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하여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도 피해자의 개념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로 보고 있다.<sup>5)</sup>

기금(fund)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되는 특정 자금을 말한다.<sup>6)</sup> 기금은 예산과 더불어 정부재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이다. 따라서 예산과는 다르게 기금은 그것을 운용하는 정부 부처의 판단 아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적인 자금이라 할 수 있다. 기금은 겉으로는 재정의 일부에 해당하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정부부처의 재량권과 자율권이 인정되고 있다.<sup>7)</sup>

정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근거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범죄피해자를 위한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 조성하며,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보호기금은 구조금의 지급, 해바라기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민간단체에 대한 시설운영비 등 보조금 지급과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관련 사업이나 활동 등에 사용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제정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설치되게 된 이유는 「헌법」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 제정 당시에는 최대 지원액이 매우 미흡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범죄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2010년 당시 벌금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설치하고, 이 기금을 활용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형소법」 제477조 제1항에 근거한 집행한 벌금 집행액,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다.

## 2. 경찰에 배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영 실태

앞서 언급하였지만, 202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총 1,012억으로 이중 법무부·검찰청이

연구 제15권 제1호, 2016, 31-32면 재인용.

5) 헌재 1992.2.25. 선고 90헌마91결정; 1995.7.21. 선고 94헌마136결정; 1997.2.20. 선고 96헌마76 전원재판부; 2000.9.6. 선고 00헌마550 제2지정재판부.

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6015&cid=42152&categoryId=42152>(2021. 3. 2).

7) 김상겸·조홍중,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다양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2015. 11, 14면.

459억(45%), 여성가족부가 314억(31%), 보건복지부가 223억(22%), 경찰청은 13억으로 전체의 1.3%에 배정되는 등 여러 정부부처가 공동 집행하고자 나누어 관여하고 있다.<sup>8)</sup>

본 논문에서는 각 정부 부처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현황과 운영에 관해서는 제외하고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만을 검토하고자 한다.

#### 가. 경찰의 기능별 피해자 보호

최근까지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서포터, 보호관 제도의 운영,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활동,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범죄피해자 보호는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관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심리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 이를 미연에 방지할 우리의 사회적 안전망은 현재에도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sup>9)</sup>

이러한 미흡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지원 활동은 각 기능별로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발전시켜왔다.

또한 경찰은 2018년 4월 현행법상 국가경찰의 임무 중 하나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여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경찰법」을 개정하여 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2018년 4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경찰의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가 경찰관에 의해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경찰의 「강력범죄 현장정리 사업」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제도는 형사절차상 피해자 참여보장 제도, 신

8) 2019-202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현황 참조.

(단위: 백만원)

	법무부(검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2020	45,877(45.4%)	31,382 (31.0%)	22,278 (22.3%)	1,321 (1.3%)
2019	40,552(42.7%)	29,654 (31.0%)	24,241 (25.4%)	1,195 (1.3%)
사업 내용	- 범피센터 운영 - 치료비·생계비등 - 범죄피해구조금 - 형사조정 수당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지원 - 성폭력피해회복 (의료·간병비 등)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지역아동보호전문 기관 설치·운영	- 위치확인장치 (스마트워치) - 피해자임시숙소 - 강력범죄 현장정리

9) 김학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역할, 치안정책연구소, 2015, 17면.

변안전 등 피해자 보호 제도,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강력범죄 현장정리사업 및 피해자 관련 전담인력 운영제도는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 제도이다.<sup>10)</sup>

특히,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근거를 둔 「강력범죄 현장정리」 사업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중상해 등 범죄로 피해자의 주거훼손, 혈혼, 약취 등 범죄로 인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약품청소, 장판교체 등을 지원한다.<sup>11)</sup>

강력범죄 현장정리 집행의 기준은 주거 등의 면적을 기준으로, 6평(19.8㎡) 이하의 경우 최대 65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6평 이상 면적은 1평(3.3㎡) 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sup>12)</sup>

방화범죄 현장정리 집행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1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불길에 다른 주거로 번진 경우에도 포함된다.

범죄피해자가 정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해자 또는 보험, 타 법령상 제도에 의하여 보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하다.<sup>13)</sup>

강력범죄 현장정리 사업의 보호기금 예산은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며, 2017년의 경우 164건을 지원하는데 2억 8,500만원, 2018년의 경우 168건을 지원하는데 4억 900만원, 2019년의 경우에도 167건을 지원, 4억 860만원, 2020년에는 4억 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운영되었다.

#### 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공

경찰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

10) 김두얼·김진영·최준규,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의 효율적 편성·운영 방안 연구」, 治安論叢 第三十三輯, 警察大學 治安政策研究所, 2017, 38-39면 참조.

11) 지원가능 내역은 ①특수청소를 위한 장비 사용료 및 안전용품·특수약품 등 소모품 구입비 ②인건비 등 전문업체 용역비(자원봉사자의 경우 수고비 등은 지원이 불가) ③일반 및 병원성 폐기물 처리비(범죄피해와 무관하게 발생한 생활 폐기물 등은 제외) ④지워지지 않는 혈흔 등으로 인하여 벽지·장판 등 내장재를 새로 교체하지 않고는 현장의 정리가 불가능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재구입비 및 시공 인건비이다. 강력범죄 현장정리 처리지침(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1890, 2016. 10. 4) 참조.

12) 예를들면, 정리가 필요한 주거의 면적이 15평인 경우, 15평 중 6평까지는 6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6평을 초과하는 9평에 대해서는 1평 당 1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최대 155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범죄의 경우는 최대 4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강력범죄 현장정리 처리지침(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1890, 2016. 10. 4) 참조.

13) 지원절차는 경찰서에서 증명서류를 송부하며, 각 지방경찰청 피해자보호팀(계)에서 서류 검토 후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에 지급요청 후, 수행업체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처리하고 있다. 강력범죄 현장정리 처리지침(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1890, 2016. 10. 4) 참조.

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다.<sup>14)</sup>

2014년부터 강력범죄, 성·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및 보복우려자 등 주거지가 노출되어 보복범죄, 신변위협, 방화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등의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가 당장 의탁할 장소가 없는 경우에 경찰은 숙박업소 등에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토킹 행위, 침입절도 행위 등으로 당장 본인의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범죄피해자에게도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긴급보호센터 등 일정 장소를 제공하거나 단기간의 숙박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할 경찰서장은 안전성, 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 내 임시숙소를 선정하고, 가해자에게 임시숙소가 절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sup>15)</sup>

임시숙소의 지원은 기본이 1일이며, 최대 5일의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1일 최대 9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만약 장기적으로 주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기관과 연계를 하여주고 있다. 그리고 숙박비 외의 식비 등은 긴급부대비로 추가 집행이 가능하다.

보통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임시숙소를 신청하고, 각 경찰관서는 심사와 확인을 거쳐 지원을 결정하고,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는 임시숙소를 연계하여 주고 경찰에서 숙박비용을 지급하여 주고 있다.

2017년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의 경우 5,122건을 지원하는데 4억 7,500만원, 2018년의 경우 4,797건을 지원하는데 4억 7,500만원, 2019년의 경우 5,027건을 지원, 4억 7,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실제 책정된 기금의 예산보다 1억원이 많은 5억 7,516만원이 집행되어 임시숙소 사용료를 외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도 변함없이 4억 7,500만원의 기금 예산이 책정되어 운영되었다.

#### 라. 경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위치확인 장치(스마트위치)

경찰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에 그 근거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신변보호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위 법에 근거하여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즉,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

14)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범죄피해 진술 및 범죄신고 등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검사가 직권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범죄피해자 등의 동의가 없으면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없다(위치확인장치지원지침 제5조 제1항·제2항). 경찰 접수 사건의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경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5) 경찰청 훈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4조 참조.

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112긴급신고, 위치확인, 주변음 강제수신 등<sup>16)</sup> 기능이 탑재된 신변보호용 위치확인장치(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를 신청하면 경찰의 경우 신변보호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위급 시 긴급버튼을 작동하게 되면 경찰관이 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위치확인장치인 스마트워치 지원의 경우 4,504건을 지원하였는데 2억 5,100만원, 2018년의 경우 5,080건을 지원하는데 2억 5,100만원, 2019년의 경우 7,057건을 지원, 2억 5,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2020년에는 경찰·검찰의 공동집행 예산으로 4억 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운영되었다.

### Ⅲ. 경찰의 입장에서 본 피해자보호기금 운영상 문제점

#### 1. 직·간접 기금 지원 비율의 불균형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피해자의 지원은 간접지원비와 직접지원비로 나누고 있다.

직접 지원비 사업은 경찰청·법무부·검찰청·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각 정부 부처가 범죄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긴급생계비나 치료비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범죄피해구조금 사업, 신변보호 강화 사업, 성폭력피해자지원(의료비 등)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직접지원과 관련된 예산 비중이 법무부에 비해서 더욱 낮은 실정이다.<sup>17)</sup>

간접 지원비 사업은 경찰청·법무부·검찰청·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각 정부부처가 민간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으로 범죄피해자 재정적 지원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이에 대한 실제 집행은 해바라기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 등 피해자지원시설 운영비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법률 지원 등

16) 긴급신고 기능은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에 신변보호대상자로 신고가 되고, 위치확인 기능은 112상황실에서 대상자 위치 및 이동경로를 지도에서 확인 가능한 기능이며, 강제수신 기능은 긴급신고 후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강제 수신되어 주변음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17) 여성가족부는 상담기관 등을 통한 간접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거의 모든 예산이 기관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허경렬, 범죄피해자보호예산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1호, 2019, 283면.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액에 관한 2019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간접 지원한 사업비는 739억3900만원(78.7%)이 집행됐는데, 기관운영비와 민간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직접 지원한 사업비는 223억4400만원(21.3%)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접지원비 보다 약 3.7배 적은 액수이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것이 직접·간접지원 비율의 불균형이다.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의 직접·간접 지원 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직접 지원하는 기금의 사업 비율은 2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지원으로 인한 범죄 피해자의 체감도는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가 기금의 직접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비의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2. 범죄피해자가 아닌 정부 중심의 기금 운영 및 편성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영은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인 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범죄피해 이전의 상황에 가깝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정부 부처별로 보호기금을 운영 및 집행하고 있다 보니, 체계적인 사업수행이 어렵고, 범죄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보호·지원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는 등 보호기금의 운영과 집행에 대한 비효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검찰은 기금의 일부로 범죄피해자의 생계비, 치료비, 주거이전비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이전비의 경우, 보통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검찰은 범죄피해자가 신청한 주거이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범죄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의 두 기관에 이중으로 신청을 하는 중복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구조는 신속한 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이 기금을 운영하는 정부 중심의 기금 운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근 4년간의 경찰의 신변보호 건수는 2017년 6,889건, 2018년 9,442건, 2019년 13,686건, 2020년 14,743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14건의 주거이전비 지원 사례에서는 신변보호 건수에 비하여 신청자가 저조하다. 이를 분석하여 보니 이사비 신청에서 지급까지 평균 58일이 소요되어 피해자의 신청이 저조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3건의 주거이전비 지원의 경우에는 범죄신고에서 이사비 신청까지 평균 71.8일, 이사비 지원신청에서 실제 이사비 지급까지는 평균 16.3일이 소요되어, 범죄신고 이후 이사비 지원까지 평균 88일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8)</sup>

즉, 2019년 이후 최근까지 검찰에 의한 주거이전비 지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3,686건인 경찰의 신변보호 신청 건수에 대비하여 이사비 지원자는 저조하고, 더불어 이사비 지원자인 범죄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신속한 보호·지원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기금의 집행과 운영이라 보여진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영이 범죄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보호기금을 지원하는 각 정부부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주거이전비, 긴급생계비, 치료비 등은 신속한 집행 및 운영을 위한 복잡한 이원화 구조 등의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편성된 각종 예산 및 보호기금들은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즉, 범죄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도 효율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sup>18)</sup>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예산도 같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면 경찰이 범죄피해자에게 신변보호의 일환으로 필요한 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경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 실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와 가장 근접해 있는 수사기관인 경찰이 보호기금의 집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와 가장 근접해 있는 경찰기관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합리적일 것이다. 이제는 예산 집행을 적절성과 그 효율성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규모의 불안정

2010년 5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제정되었지만, 당시 최대 지원액이 3천만원에 불과하였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국가적 보호체계가 부족한 것은 정부 예산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18) 2019. 7-2020. 6 기간중 범죄피해자가 이사비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총 53건에 대한 양기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공한 자료. 연합뉴스, 보복범죄 공포 커지는데...‘유명무실’ 이사비 지원?, 2020. 10. 7일자 참조.

19) 김두얼·김진영·최준규, 앞의 논문, 29면 참조.

필요하였다. 이에 2015년 1월 동법을 개정하여 벌금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입비율을 현행 100분의 4 이상에서 100분의 6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정규예산이 아니기에 가변성이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범죄자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줄어들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보호기금 재원도 감소되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1,012억원 규모이고, 2019년의 경우 집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총액 956억원 가운데 78.7%가 운용비, 수당 등과 같은 간접비용에 사용되었다. 반면 범죄피해자에게 직접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범죄피해자 구조금(100억원)과 피해자 긴급생계비(15억원), 신변보호(10억원), 피해자 치료비 (35억원) 등 167억원에 불과하여 전체 기금 집행액의 21.3%가 사용되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특별비인 벌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불규칙하고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벌금형이 모든 범죄에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기부도 일정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sup>20)</sup> 차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규모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5. 범죄피해자 주거이전비 집행체계의 문제점

앞서 검찰에서 집행하고 있는 주거이전비는 보복 등으로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다. 즉, 범죄피해자, 증인, 신고자, 그 친족 등에게 이사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이다.<sup>21)</sup>

2019년 경찰의 신변보호 건수는 13,686건, 2020년은 14,743건이지만, 2019.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간 이사비 지원을 신청한 범죄피해자들은 53명으로 극히 저조하다.<sup>22)</sup>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보통 범죄피해자 등의 이전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전비 지원신청서’와 더불어 부동산매매(임대) 계약서, 이전비 관련 영수증,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정 관련 서류,<sup>23)</sup> 전학 이유서 등 증빙서류 등과 함께 그 소요된 비용을 청구함을 원칙으

20) 뉴스1, 시행 13년 맞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일단 성공’...과제는, 2018. 3. 15일자.

21) 이전비의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으로 ① 「범죄신고자법」 제2조 소정의 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의 피해자, 범죄 신고자 및 그 친족 등에 해당하고, ② 범죄피해 진술 및 범죄신고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22) 양기대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9. 7-2020. 6 기간중 범죄피해자가 이사비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총 53건이다.

23)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5조에 의하면, 학교폭력 사건 중, 형사입건되지 아니하였으나 학교폭력 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 한다.<sup>24)</sup>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비 지원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담당 검사에게 신청서를 인계한다. 검사는 신청서를 인계 받은 후, 소속 부장검사나 지청장의 심사 결재를 받아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범죄피해자의 주거이전비는 신변보호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검찰청이 단독으로 집행하는 예산인데, 범죄피해자에게 당장 필요한 보호기금의 지연 지급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14건의 주거이전비 지원 사례를 분석하여 보니 평균 58일이 소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범죄신고 이후 이사비 지원까지 평균 88일이 소요되었다.<sup>25)</sup>

이처럼 주거이전비 지급의 지연은 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인 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고, 피해 이전의 상황에 회복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의 요청과 실행은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거이전비의 신청은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의 지원결정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형태의 구조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에게 보호기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못하는 집행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이전비 집행을 검찰 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주거이전비를 신청부터 지급까지 검찰과 공동으로 집행하게 되면 범죄피해자는 어느 곳에 신청을 하더라도 신속하게 피해 회복에 필요한 주거이전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6.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예산 비용의 부족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안전보장을 위한 지원활동 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임시숙소 제공이다. 특히, 강력범죄, 보복범죄, 신변위협, 방화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범죄피해자를 위해 경찰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에 근거하여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강력범죄, 보복범죄, 신변위협, 방화 등의 우려로 임시주거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 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1일이고, 최대 5일까지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1일 최대 9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각 지역별 경찰서에서는 안전하고, 건

24) 「범죄피해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상 제출 서류는 △이전비 지원신청서 △이사비 영수증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서 △통장 사본 △전학이유서(학교폭력) 등 이다.

25) <이전비 집행 현황 분석(2019. 7. 1~12. 31.)> ▶분석 대상: 경찰을 통해 이전비 지원이 이루어진 40건 ▶신청자: 대부분 여성(40명 중 38명/95%) ▶피해 내용: 성범죄(11), 주거침입(10), 가정폭력(9), 스토킹(7), 폭행(1), 살인미수(2)등 주로 여성대상 범죄 ▶소요기간: 이전비 신청 완료부터 실제 지급까지 평균 16.7일 ※ 신청 완료일은 이사 완료, 구비서류 제출 등 요건 완비 날짜 기준.

전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숙박업소, 수련원 등에 임시숙소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시숙소는 반드시 가해자에게 임시숙소가 절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2020년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은 11억원이다. 특히, 범죄 직후 신변안전을 위한 임시숙소 이용시 숙박비용 지원은 유일하게 경찰이 단독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의 경우 5,122건(9,000박)을 지원하는데 4억 7,500만원, 2018년의 경우 4,797건(7,543박)을 지원하는데 4억 7,500만원, 2019년의 경우 5,027건(7,858박)을 지원, 4억 7,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러나 2019년의 경우 실제 책정된 사업 예산보다 1억원이 더 많은 5억 7,516만원(121%)이 집행되어 각 경찰서에서 임시숙소 사용료를 외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책정된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사업 예산은 4억 7,500만원으로 매년 같은 액수로 책정되어 임시숙소 사업 예산 비용이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였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보복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변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임시숙소 제공 지원 활동은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임시숙소 사업비 예산은 반드시 현실에 맞게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

#### Ⅳ.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청 신규 사업을 통한 확보 방안

###### 가.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야간 응급진료비 지원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의료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경찰이 범죄발생 직후 범죄피해자에게 긴급한 응급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다. 특히 야간에 발생한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긴급한 응급진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야간에는 범죄피해자보호센터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검찰 등에 치료비를 청구하기가 불가능하며, 범죄피해자가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응급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치료비를 집행하여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치료를 받아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야간에 발생한 범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중 응급실의 치료를 받는 범죄피해자에게 실비로 응급실 진료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응급진료비 지원에 관한 신규 사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범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병원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은 고가로 책정이 되어 있어<sup>26)</sup> 범죄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의 검찰 치료비 예산으로 집행하던 지원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단서 발급비용은 범죄피해가 피해의 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지출되어진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여 범죄피해자를 위해 이에 대한 새로운 사업 신설이 필요하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야간 응급진료비 지원, 진단서 발급비 지원 등을 위한 집행 절차로 경찰의 단계에서는 사건담당 경찰관이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비용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은 주로 야간이기에 상황실장 또는 경찰서의 과장이 결재를 하고, 이후 각 지방청의 청문감사담당관실에 보고를 하고 경리계에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에 경찰청 신규 세부사업이 확정이 되고, 이에 대한 예산안에 결정이 된다면, 응급실 진료비와 진단서 발급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경찰범죄 통계에 따른 야간의 범죄발생 비율,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평균 진료비, 진단서 비용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산출해야 할 것이다.

#### 나. 범죄피해자용 응급지원 물품 제공의 지원

최근 강릉시약사회에서는 강릉경찰서를 찾아 범죄피해자 응급처치를 지원용 구급가방을 지원하여 범죄로 인한 상처 치유와 고통받는 범죄피해자들이 조속히 회복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하였다.<sup>27)</sup>

이처럼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의 핵심은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즉시 확인하여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상 검찰에서 집행하는 긴급생계비·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제도는 의결 절차 등으로 즉각적인 지원이 불가한 것이 현 실정이다.

26) 일반진단서의 상한금액 2만원이고, 3주미만의 상해진단서 상한금액 10만원, 3주이상의 상해진단서는 15만원이다.

27) 데일리팝, '강릉시약, 지역경찰에 범죄피해자 구급가방 100개 지원', 2020. 9. 22일자.

따라서 경찰은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범죄현장에서 중요범죄(살인·강도·방화·체포감금·약취유인 등)의 발생 직후 즉각 피해자를 위해서 지원이 가능한 구급약품·속옷 등 위생용품, 기타 생필품 등이 담긴 가방을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응급키트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보온담요·마스크·손수건·안대·귀마개 등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기금 내에 새로운 신규 세부사업의 신설이 필요하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가방에 지원안내서, 세면도구, 위생용품, 전화카드 등을 담아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뉴욕경찰청(NYPD)은 범죄피해자에게 보온담요를 지급하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참고 할 만한 선진 사례라 하겠다.

#### 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긴급 안정자금 지원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면 최초로 모든 범죄피해자를 만나서 접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생계비의 지원은 검찰에서 집행하고 있어 경찰이 신속한 지원을 하고자 하여도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가 긴급한 생계의 유지, 신속한 생업 복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생계비 지원의 경우, 매달 범죄피해자 1인에게 50만원, 2인 가족 80만원, 2인 초과하는 가족의 경우 추가 1인당 20만원씩 증액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생계비는 범죄피해 1건에 대하여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다만,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3개월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38조). 결국은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의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 2018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긴급생계비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해 대검찰청이 운영하는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는 보통 1~2개월에 한 번씩 심의회의가 개최되고 있어, 정작 범죄피해자가 필요한 시기에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당장 가정폭력으로 쫓겨난 여성,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 직업이 없는 가정폭력 피해자, 범죄로 상해를 입은 일용직 노동자 등 범죄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명백히 어려운 피해자에게 범죄 발생 직후 생계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검찰에서 지급하는 긴급생계비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긴급 안정자금의 지급 내역을 검찰과 반드시 공유를 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512,102원으로 고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긴급안정자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

### 라.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통역 지원

2021년 1월말 기준, 체류외국인은 201만 명으로<sup>28)</sup> 최근 5년간 매년 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sup>29)</sup> 이러한 흐름에 반해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인원은 2018년 기준 133명에 불과하여 다수의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의 취약한 지위와 정보력 부족, 즉 범죄피해자가 되어도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하고,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신분 노출로 받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놓여있다고 생각된다.

외국인 범죄피해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범죄 직후 충격·분노·좌절·혼란·슬픔 등 다양한 심리 반응을 보이며, 범죄피해로부터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초기에 상담을 통해 치료와 보호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낯선 외국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 더욱 조속히 피해에 대한 상담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와 의사소통 불편함 등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일정한 요건이 되면 생계비, 치료비, 심리적 지원 등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피해자도 그 대상이 된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살인·강도·강간 등 주요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초기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심리상담에 필요한 통역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통역비 지원에 관한 새로운 신규 사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청 기존 사업을 통한 확보 방안

### 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경찰 재원의 확대

경찰은 범죄 발생 직후 긴급단계에서 범죄피해자를 만나고, 그들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경찰청에 배정된 예산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202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청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 1,012억 중 13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를 위해서 지원·보호하기에는 재원상에 한계가 있다.

특히, 경찰에서 제공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이외에 2016년도부터 검찰청에서 집행하던 강력범죄 현장정리 사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였고, 신변보호조치의 일환인 위치확인

2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1년 1월호 참조.

29) 김학신, 치안전망 2020, 치안정책연구소, 2019. 12. 23, 182면.



장치 사업이 경찰청으로 일부 이관이 되었다.<sup>30)</sup>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피해자 임시숙소 사업처럼 경찰청 단독 내지 위치확인장치 사업처럼 검찰청과의 공동집행하는 사업비는 크게 증액되지는 않았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통계에 의하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신변보호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대상 성착취와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범죄피해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위치확인장치가 탑재된 스마트위치 지급 사업과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사업은 연말에 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외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예산 증액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예로 2019년 11~12월의 경우, 경찰은 위치확인장치 사용료 8,200만원을 2020년 1분기에 지급하였고, 2018년, 2019년 2년간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사용료 중, 예산의 부족으로 미지급된 비용 1억원이 발생하였고, 2019년도에는 강력범죄 현장정리 사업의 예산으로 지급하였다.

2017년 이후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절실한 반면에 전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1%에 불과한 경찰에 배정된 재원은 매년 부족한 실정이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청에 배정된 사업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먼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 확보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법령의 개정이 통과되면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재원은 어느 정도 확충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전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경찰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피해자 임시숙소, 위치확인장치(스마트위치), 강력범죄 현장정리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 할 수 있도록 이전 보다는 2-3배 이상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예산이 증액된다면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리라 생각된다.

#### 나. 범죄피해자를 위한 주거이전비의 경찰 이관 집행

앞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신변보호 건수는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하여 주거이전비의 신청은 사례는 지원자가 저조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사비 신청에서 지

30) 경찰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치확인장치·강력범죄 현장정리는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 후 집행이 대폭 증가하였다. 위치확인장치의 경우, 검찰에서 집행하던 2015년 105건이었지만, 경찰·검찰이 같이 집행하던 2016년에는 3,356건(경찰 3,299건·검찰 57건)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강력범죄 현장정리 사업의 경우에도 검찰이 집행하던 2014년에는 41건이었으나, 경찰로 이관이 된 2016년부터는 191건으로 4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sup>31)</sup>

여기에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중적인 집행 구조로 인한 지연 지급 문제, 이전비 심사의 지연 및 비합리적인 지원 거부, 이전비 신청 서류·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신청의 저조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주거이전비의 집행을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지원절차와 집행방식을 피해자 위주와 편의로 개선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전 2018년 8월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경찰 개혁자문위원회에서 개최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체계 개선」에 관한 공식적인 의견에서도 주거 이전비와 긴급생계비 등이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집행해야 한다는 권고를 하였다.<sup>32)</sup>

또한 「2019년 기금운용계획 법사위 심사」에서 몇몇 국회의원은 법무부에 이전비·치료비·생계비 등 기금의 집행 지연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을 경찰청에 이관하도록 요구하였고, 당시 법무부 차관도 이전비 이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2020년 10월 국회 양기대의원도 시민들은 보복범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 이사비 지원은 유명무실하다는 언론 보도에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사업을 경찰로 이관하여 일원화하고 지원절차와 집행방식을 개선해서 범죄피해자의 편의 위주로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3)</sup>

따라서 범죄피해자가 신속한 지원을 받아 적시에 피해자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전비에 관한 한 경찰로 이관하여 범죄피해자와 1차로 접촉하는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긴급생계비·치료비의 경찰 이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치료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전문가, 학계,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치료비, 생계비는 범죄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료비는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신체적인 피해는 연 1,500만원으로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202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상 간병비 포함하여 치료비는 35억 1,600만원이 배정되어 있다.

31) 2019. 7- 2020. 6 기간 중 범죄피해자가 이사비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총 53건에 대한 양기대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 연합뉴스, 보복범죄 공포 커지는데...‘유명무실’ 이사비 지원?, 2020. 10. 7일자.

32) 연합뉴스, “범죄피해자 치료비·주거이전비 경찰단계서 조기 집행해야”, 2018. 9. 2일자.

33) 연합뉴스, 보복범죄 공포 커지는데...‘유명무실’ 이사비 지원?, 2020. 10. 7일자.

긴급생계비는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며, 범죄피해로 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생계비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증액이 되며, 지원 1회 50만원, 3개월 지급,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장례비는 4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202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상 긴급생계비·장례비는 15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현재 범죄피해자를 위한 치료 및 자립지원의 일환으로 검찰의 긴급생계비·치료비 집행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급의 지연, 전문성 부족, 비합리적인 지원의 축소·거부, 무리한 대면상담,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여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예로 2018. 11. 5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법사위 심사’에서도 당시 표창원 국회의원은 긴급생계비·주거이전비·치료비 지원사업의 복잡한 집행 체계 및 지급 지연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그런 비용은 경찰에서 즉시 일단 집행을 하고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국회와 법무부, 경찰 그리고 범죄피해자가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행체계상 치료비·생계비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은 여전히 검찰에서 운영하여 지연 문제는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경찰에 이관하면 전국의 18개 시·도경찰청 및 256개 경찰서에서 273개에 달하는 현장 조직을 활용하여 범죄피해자가 신청한 치료비·생계비를 모아서 하지 않고 피해사건별로 즉시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치료비·생계비는 7일 이내, 장례비는 2~3일 이내 지원 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치료비·생계비에 대한 집행체계상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치료비·생계비(장례비 포함) 지원 사업 전체를 경찰로 이관하여 오직 범죄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라. 범죄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지원금 상향

현재 기금으로 지원되는 신변보호 조치 중 하나가 범죄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신변보호 조치는 그 주관부처가 유일하게 경찰청이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며, 범죄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찰은 2014년 부터 강력범죄, 성·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및 보복우려자 등 피해자의 주거지가 노출되어 이로 인한 보복범죄, 신변위협, 방화 등 추가적인 범죄피해가 발생 될 우려가 있거나 또한 야간에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고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긴급하게 임시로 숙소가 필요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피해자 임시숙소의 지원은 기본이 1일이며, 최대 5일의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고, 1일 최대 9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대 5일의 숙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사용 일수가 1.6일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주요 원인은 당연히 예산 부족이다.

즉, 2016년에는 3714명이 5742일을 숙박하고, 2017년은 5122명이 9000일, 2018년은 4797명이 7543일, 2019년은 5027명이 7858일을 숙박하였다. 그러나 예산은 매년 4억 7,5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집행되고 있다.

최근들어 신변보호 요청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가하지 않고 동일하게 집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2017년의 경우처럼 임시숙박이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을 미리 당겨서 쓰거나, 숙박업소에 외상으로 이용하는 등 국가기관으로서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매년 부족한 예산의 배정으로 인하여 국가는 임시숙소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안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를 국가가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우선 전체 보호기금의 예산도 이전보다 확대 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가장 긴급하게 신청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임시숙소 제공에 필요한 지원금이라도 당장 상향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은 총1,012억 이고, 이중 경찰청에 배정된 기금 예산은 13억으로 전체에 1.3%로 너무 열악한 상태이다.

또한 특정 정부부처 중심으로 기금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발생시 최초로 범죄피해자를 만나는 경찰이 1%대의 열악한 피해자보호기금으로 범죄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신속한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범죄피해자보호에 있어 경찰의 열악한 재정 현실과 더불어 국회는 정부부처 간 비협조, 직접비 보다는 간접지원비 과다 집행,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급지연 등 다양한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여 왔다.

이러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정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그 동안 국회·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제기하여 왔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 중 본 논문은 경찰의 입장에서 본 피해자 보호기금의 운영상 문제점과 재정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보았다.

특히, 보호기금이 사용되는 직접비·간접비에 집행되는 기금 지원비율의 불균형, 특정 정부부처 중심의 기금 운영 문제, 집행의 비효율성, 검찰의 주거 이전비 집행체계의 문제점,

임시숙소 예산 비용 부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 실제 국회·법조계·학계·시민단체, 보호기금을 집행하는 각 정부부처들도 이러한 문제를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리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입장에서 본 재정 확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은 크게 둘로 구분하여 범죄기금 내 경찰청 신규 사업을 통한 확보 방안과 기존 사업을 통한 확보 방안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내 신규사업을 통한 확보 방안으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야간 응급진료비 지원, 응급지원 물품의 제공의 지원, 긴급 안정자금 지원,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심리상담 통역 지원 지원으로 보호기금 내 새로운 신규 사업을 통한 경찰의 기금의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청 기존 사업을 통한 확보 방안으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경찰 재원의 확대, 범죄피해자를 위한 주거이전비·긴급생계비·치료비를 경찰로 이관하여 이전보다 실효적·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제시하고, 또한 임시숙소의 지원금을 상향하여 범죄피해자를 국가가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오직 범죄피해자들 입장에서 검토해 본 것으로 이전보다는 신속하게 보호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 각 정부부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중 일부를 경찰로 이관하여,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기금을 신속하게 집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일부분인 전체 기금의 1%대 밖에 안되던 기금액을 우선 조속히 증액한다면,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재정적인 한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기금의 재정 확보가 정착된 이후 경찰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면 부족한 재원도 충분히 확보되리라 본다. 더불어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경찰의 활동이 합리적으로 뒷받침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보완도 조속히 함께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김두얼·김진영·최준규,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의 효율적 편성·운영 방안 연구』, 治安論叢 第三十三輯, 警察大學 治安政策研究所, 2017.
- 김상겸·조홍중,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다양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2015.
- 김연수·이재영,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직 및 예산운영의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1호, 2016.
- 김학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역할, 치안정책연구소, 2015.
- 김학신, 치안전망 2020, 치안정책연구소, 2019. 12. 23.
- 허경렬, 범죄피해자보호예산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1호, 2019.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1년 1월호.
- 뉴스1, 시행 13년 맞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일단 성공’...과제는, 2018.3.15.
- 데일리팜, ‘강릉시약, 지역경찰에 범죄피해자 구급가방 100개 지원’, 2020.9.22.
- 머니투데이, 성관계 강요에 감금에...불안한 사람들 ‘신변보호’ 3년새 2배 ↑, 2021. 3. 4.
- 연합뉴스, 보복범죄 공포 커지는데...‘유명무실’ 이사비 지원?, 2020.10.7.
- 연합뉴스, “범죄피해자 치료비·주거이전비 경찰단체서 조기 집행해야”, 2018.9.2.
- 한국경제, 강력범죄 줄고, 사기 등 ‘불황형 범죄’는 증가, 2020. 5. 4.
- 한국일보, “『단독』범죄피해자기금 74%가 운영비로 샌다”, 2019.7.8.
- Kennedy, L. W. and Sacco, V. F., Crime Victims in Cont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헌재 1992.2.25. 선고 90헌마91결정.
- 헌재 1995.7.21. 선고 94헌마136결정.
- 헌재 1997.2.20. 선고 96헌마76 전원재판부.
- 헌재 2000.9.6. 선고 00헌마550 제2지정재판부.

투고일자 : 2021. 03. 08

수정일자 : 2021. 03. 26

게재일자 : 2021. 03. 31

<국문초록>

## 공적기금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

— 경찰 입장에서 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영의 문제점과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하여

김 학 신

현행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가 구조해야 한다는 사상에 근거하여 1987. 11.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이에 통합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하였지만, 국가가 범죄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어려운 것은 국가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래서 2010. 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하여 벌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설치하고, 이 기금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현재 각 정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호기금을 집행하고 있다 보니, 체계적인 사업수행이 어렵고, 신속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는 등 구호기금 집행에 대한 비효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총 1,012억이고, 이중 법무부·검찰청이 459억으로 45%, 여성가족부가 314억으로 31%, 보건복지부가 223억으로 22%를 차지한 반면, 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만나서 보호 및 지원해주어야 하는 경찰에 배정된 피해자보호기금은 13억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는 등 보호기금의 배분에 있어 불균형이 아주 심각하다.

특히, 경찰에 배정된 열악한 보호기금으로 인하여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은 어렵고, 이러한 상황은 몇 년간 지속되어 왔다.

그 동안 국회 등에서는 범죄피해자기금에 대하여 특정 정부부처 중심으로 기금이 편성되거나, 직접지원비 보다는 간접지원비 과다 지원, 주거이전비,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기금의

지급지원 등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다.

또한 경찰에 요청하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경찰청에 배정된 보호기금은 매년 전체 예산의 1%대에 불과하여 경찰에 요청된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경찰에 배정된 열악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입각하여 경찰의 입장에서 살펴 본 운영상 문제점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정적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법, 기금운용, 구호기금, 주거이전비